

‘전두환 회고록’ 역사 왜곡의 극치

전두환 꾀변

“광주서 국군의 무차별 살상행위·발포명령 없었다”

광주는 분노

1980년 계엄군에 의한 사망 165명·81명 행방불명

전두환 전 대통령이 3일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쏟아낸 망언 내지 사실 및 역사 왜곡은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 가운데 사실 및 역사 왜곡의 극치로 꼽히는 것은 “광주에서 국군의 무차별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명령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다”는 꾀변이다.

그의 주장과 달리 1980년 한 해에만 광주전남에서는 계엄군에 의해 165명이 숨지고 81명이 행방불명됐다. 공수부대 마크가 선명한 군복을 입고 공수부대를 비롯한 계엄군이 광주의 거리와 버스, 건물에서 저지른 살인 행위가 무려 165건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됐다.

계엄군의 만행의 기록은 언론을 통한 사진, 기사, 다큐멘터리, 목격자 등을 통해 증명되며 무엇보다 광주에선 총칼에 의한 학살을 넘어 헬기에 의한 무차별 난사 증거(전일발당)마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드러난 상황이다.

행방불명의 경우 신청자는 무려 441명에 달했지만, 인정받은 것은 81명뿐이었다. 이는 광주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다.

발포명령 관련해선, “실탄 지금은 곧 발포명령이자 자위권 발동”이라는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의 1995년 검찰 진술이 밝히듯 1981년 5월 21일 1시 40분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전 공수부대에 실탄이 미리 지급된 사실이 검찰 수사 및 국방부 과거 사위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1981년 5월 21일 국방장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주요 지휘관 회의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해 “자위권 발동”을 강력히 주장했던 사실이 국방부 과거 사위위원회 조사와 전두환 집권 당시 국군보안사령부가 펴낸 ‘제5공화국전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군인복무규율에서 정한 자위권을 초



더욱이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권고문을 내놓기도 했다.

5·18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에 가깝다. 이미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일당에 대해 5·18 특별법에 따른 검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 행위가 드러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그의 회고록 집필을 도운 핵심측근은 “전 전 대통령 입장은 문민정부 이후 마녀사냥식 수사와 재판, 언론 보도를 통해 5·18이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한 건의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현장조사를 하지 않느냐. 또 광주에선 헬기 사격 관련 재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한 후 국민의 평가를 받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 (광주사태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씹김대에 내놓을 재물이 없다고 하겠다(자신을 제물로 표현) ▲5·18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검거한 탓에 일어

났다 ▲나의 대통령 취임은 상황의 산물이고 시대의 요청이었다 등의 표현도 꾀변이며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모두 2000쪽에 달하며 ▲10·26사태 이후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1권 ‘혼돈의 시대’ ▲대통령 재임 중 국정수행 내용을 서술한 2권 ‘청와대 시절’ ▲성장 과정과 군인 시절·대통령 퇴임 후 일들을 담은 3권 ‘황야에 서다’ 등 총 세 권으로 구성됐다.

출판사 측은 이날 제1권이 유통됐으며 주 중 2, 3권도 시중에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집단발포 전 공수부대에 실탄 지급

헬기 무차별 난사 증거 드러났는데

“5·18 재조사·재평가” 상식밖 주장

병이 아닌 진압군에게 부여한 사실은 곧 민간인에 대한 살상명령이며, 전 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강력히 그 주장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는 회고록 내용도 어불성설이다.

전 전 대통령의 5·18 폭동 운운 행위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지난 1995년 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까지 ‘5·18사태’로 표현돼온 5·18을 ‘5·18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삼권분립 내지 민주질서 훼손 발언으로 헌법적 가치마저 부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근혜 구속 후 첫 조사…오늘 구치소서

심리적 상황·경호 등 이유

한응재 부장검사 방문할 듯

검찰이 지난달 31일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4일 첫 조사를 벌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둔 3일 질문 내용 준비와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애초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구치소 조사를 요청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 요구도 수용해 조사 준비 시간을 더 확보했다. 어차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진술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

해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로 나올 때 준비해야 하는 경호 문제 등을 신중 쓰지 않아도 되는 만큼 검찰로서는 조사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수사본부는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장시간 대면조사 했던 한응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을 구치소에 파견해 이번에도 조사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를 이끌어 온 이원석(48·27기)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동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검찰은 진전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이나 관련자의 진술 및 물증 등을 제시하며 박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속 나흘째인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케인 서향희(4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접견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 변호사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과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일반 접견인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고 오전 11시 30분을 조금 넘겨 구치소로 들어갔다가 11시 55분께 밖으로 나왔다.

기존에 선임계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법률적 조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범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서 변호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 변호사가 인척인데다 같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기존 변호인단과 니누기 어려운 사적인 대화나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작년 하반기 검찰 수사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유 변호사도 이에 앞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연합뉴스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황교안(왼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선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점검실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남대 “박근혜 동상 고민되네”

“불명에 퇴진…역대 대통령과 똑같이 설치해야 하나”

현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서 탄핵 파면된 데 이어 이제는 구속 수감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야 할까? 요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직면한 최대 고민이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서술이 시퍼렇던 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정면 준공식에 참석해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지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곳에는 볼거리가 다양한데 그중 하나

가 전직 대통령을 꼭 닮은 동상이다. 청남대 내 대통령광장에 가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청남대 관리권을 충북도에 넘겨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는 9명의 대통령 동상이 설치돼 있다. 제작된 동상은 청남대 내 ‘대통령길’ 입구에 나란히 세워졌다.

청남대는 전직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전두환(1.5km)·노태우(2km)·김영삼(1km)·김대중(2.5km)·노무현(1km)·이명박(3.1km) 대통령길도 따로 만들었다. 대통령길이 없는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 동상은 역사교육관 앞 양여장 주변

에 설치됐다.

청남대관리사무소의 고민은 불명에 퇴진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상도 역대 대통령들과 똑같이 설치하느냐는 것이다. 대통령광장 앞 동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제작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지만, 2015년 새롭게 선보인 동상 광장은 다르다.

역대 대통령 동상을 모두 세웠으니 형평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동상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파면에 구속 수감까지 되면서 고조된 부정적 여론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청남대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정도로 청남대와 별다른 인연이 없다. 청남대는 이를 이유로 ‘박근혜 길’은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4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1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화정동 대지 967㎡ 신세계 백화점 부근 매 50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을,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조사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